

!퓨처스랩 제2출범식



[금융]
신한금융그룹
신한퓨처스랩 제2출범
5년간 혁신기업 2.1조 투자
04

현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女 행복추구권 등 침해” 판단
내년 말까지 법률 개정해야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모두 금지한 현행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K씨가 낙태죄와 죽탁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현재는 태아도 생명인 만큼 무분별 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임신초기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순 위헌결정으로 낙태죄의 적용을 전면 중단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는 말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지 6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고 현재에 위헌심사가 제기된 것도 여러 차례다. 지난 2012년에는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위헌선언 정속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인보사, 늑장보고 논란에 “안전성에는 문제 없다”

코오롱생명과학 “검증 필요했을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에 293유래세포가 혼입된 것을 2월 말에 알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늑장대응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우려 가 커지고 있는 인보사의 종양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11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사장과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상무)은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보사의 종양 유발 가능성과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연골 세포에 신장유래세포(GP2-293유래세포)가 혼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우선, 회사측은 ‘늑장대응’에 대해 해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293세포 혼입 사실을 지난 2월 말 미리 알았지만, 이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숨겼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달 22일 식약처에 이 사실을 처음 알렸고, 29일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인보사의 출고는 지난 1일부터 중지됐다.

이 사장은 “코오롱티슈진이 2월 말 미국파트너시인 바이오릴라이언스로

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것이 맞다”며 “하지만 당시에는 시험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93세포가 ‘종양유발세포’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상무는 “형질전환세포(TC)는 그것이 연골유래 세포이든 신장유래 세포이든 간에 종양원성을 갖고 있다”며 “이 성질을 전임상단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종양원성은 없어졌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미국 FDA와 식약처도 이 종양원성의 위험성을 인지해 방사선 조사를 권고했으며, 코오롱티슈진은 56Gy(방사선량)로 세포 사멸이 가능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59 Gy로 증량해 방사선 조사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59Gy로 조사시 24일이면 TC가 완전 사멸하지만, 44일 까지 추가관찰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인보사와 같은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했던 전례를 들어, 인보사가 품목 취소 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Economy

↑ 코스피 2224.44 (+0.05)
↑ 코스닥 766.49 (+6.34)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0)
↑ 환율 (원·달러) 1139.40 (+0.80) (11일)

코린도의 눈물 ‘제2의 시도상선?’

1000억대 세금에 골프장 매각

법인세 등 거액 세금 부담에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판결

‘서서울CC’ 호반건설에 넘겨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 코린도그룹이 법인세 등 1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 받아 국내 유명 골프장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역외 탈세해 재판에 넘겨졌던 ‘시도상선’ 사태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세율을 올려 기업의 정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골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서울컨트리를 런(이하 서서울CC)은 코린도그룹이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느끼고 매각했다.

서서울CC는 코린도그룹의 계열사인 서서울관광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모기업인 코린도그룹은 고승상배 동화기업 창업주의 장남인 승은호 회장이 차린 회사로, 코리아-인도네시아의 합성이다. 코린도는 현재 인도네시



서서울CC.

/호반건설

아에서 목재, 제지, 화학, 물류, 금융 등에서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20위권 대기업이다. 연간 매출액은 13억달러 (1조4800억원 수준)에 달한다.

한국자회사로는 코린산업이 있다. 코린산업의 주주는 승은호 회장, SIG 인베스트먼트, 서서울관광으로 나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린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282억 원, 당기 순이익은 19억원 정도다. 서서울관광의 연간 매출액은 143억원, 당기 순이익은 36억원이다. 코린도그룹의 증손자 회사격인 서서울CC의 연간 매출액은 개별 공시돼 있지 않지만 호반건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연 140억 원으로 알려진다. 기업의 ‘효자 사업’

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승 회장이 10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서서울CC를 처분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최근 국세청은 승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승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닌 만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승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이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억원의 세금만을 취소하며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서서울CC 등에 대한 법인세도 거액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3면에 계속>

/체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100년 전, 그 날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1일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과 5당 원내대표 등 국회 원내대표단이 중국 상하이의 융안백화점 옥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 신년 축하식 때 촬영된 기념사진. /연합뉴스

임정 수립 100주년, 北 최고인민회의, 韓美 정상회담

‘슈퍼 4·11’ 남북미 동상삼동

남북미 정상들이 4월 11일 굵직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됐다. 4월 11일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가, 북한에서는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미국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각각 열렸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국민이 지킨 역사-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주제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때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

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 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정부”라면서 “새로운 100년, 선대들의 뜻을 이어 받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다음은 북한에서 개최된 4·11 최고인민회의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최고지도기관이다. 법률 제·개정 및 대내외 정책 수립, 국무위원회, 내각 등 심의·승인이 이 회의에서 이뤄진다. 북한은 이번 회의 때 대미(對美)-대남(對南) 정책 방향을 비롯해

비핵화 협상 전략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미국 현지시간), 서울과의 시차 13시간)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이후 4개월만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